

‘잠재성장률 2%p 제고’를 위한

經濟週評

세계 경제 패러다임 변화와 한국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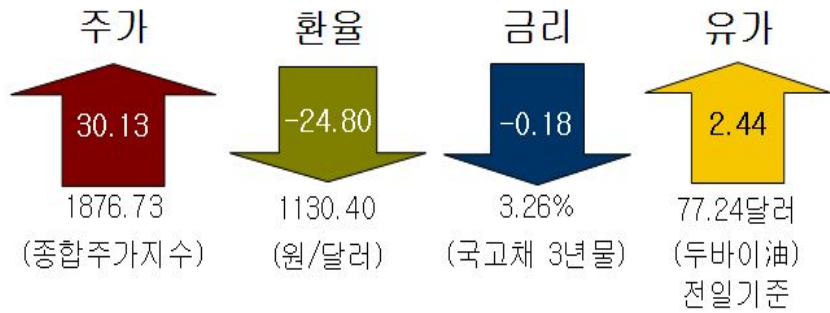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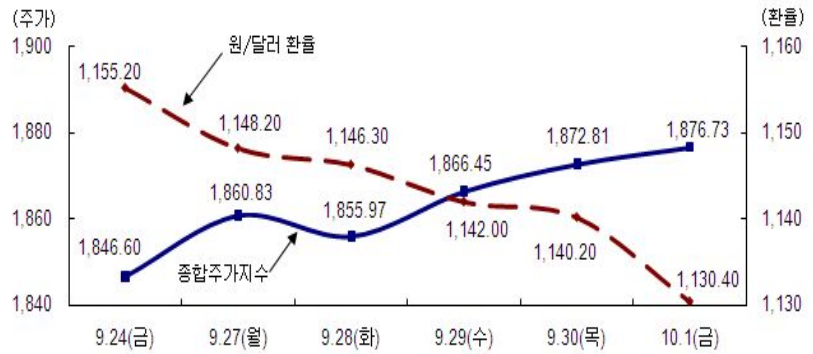
10-38(통권 418호)
2010.10.1



- 외국인투자 부진과 활성화 과제
- 제조업 · 신규 투자 중심 FDI 유치 필요

Better than
the Best!

週間 主要 經濟 指標 (9.24~10.1)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1
□ 외국인투자 부진과 활성화 과제	1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17

□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연구본부 : 유 병 규 경제연구본부장 (2072-6210, bkyoo@hri.co.kr)
 : 김 동 열 연구위원 (2072-6213, dykim@hri.co.kr)

Executive Summary

□ 외국인투자 부진과 활성화 과제 - 제조업·신규 투자 중심 FDI 유치 필요

■ 외국인직접투자 부진 현황과 특징: 제조업 비중 급락, 조세피난처 비중 증가

먼저, FDI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00년부터 외국인직접투자의 절대적 규모가 감소하는 추세(152.5억 달러→ 114.8억 달러)에 있으며, GDP대비 비중도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둘째, FDI의 산업별 추이를 보면 제조업에 유입되는 FDI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9년도에는 32.4%까지 하락하였으며, 서비스업의 비중은 급속히 증가하여 2009년에는 66.1%에 달했다.

셋째, 지난 10년간 업종별 추이를 보면 제조업의 경우 전기전자, 화공, 운송용기계 등 3개 분야 비중이 전체의 68.1%에 달하고 있으며, 서비스업의 경우 금융보험업이 35.6%, 부동산·임대업과 사업서비스업이 각각 10.2%, 11.5%로 높은 비중이다.

넷째, 국가별 FDI의 추이를 보면, 최근 10년간 미국 네덜란드 일본 등 전통적 투자국가의 비중이 감소하는 반면, 영국 캐나다 중국 등 신흥투자국들의 비중은 커지고 있다. 버진아일랜드, 라부안, 파나마 등 조세피난처(Tax Haven)를 활용한 FDI의 비중은 '90년대 평균 0.6%에서 최근 10년 평균 1.5%로 2.5배 급증했다.

다섯째, 형태별로 보면, 공장을 세우기 위한 그린필드형 FDI의 비중이 '04년 52%까지 감소했으나, '05년 이후 다시 증가하여 '09년에는 71%까지 높아졌다.

여섯째, 투자시점별 FDI 비중을 보면 신규투자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음에 비해, 기존 투자기업들의 증액투자 비중이 지난 10년 평균 52.5%로서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일곱째, 1998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의 구조조정의 시기에 1억 달러 이상 대형투자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 외국인직접투자(FDI)의 문제점, 그리고 오만과 편견

먼저, 국민소득 수준과 경제성장률, IT인프라 등으로 평가한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치 잠재력은 세계 16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에 비해, 유치 성과는

2000년 92위에서 2008년 123위로 크게 떨어져 여전히 잠재력 이하 그룹에 위치하고 있다.

둘째,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금액은 2001년 2,956억원에서 2007년 4,759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으나, 투자유치금액은 감소하고 있다.

셋째,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2003년부터 조성된 경제자유구역에 2004년부터 2010년3월까지 유치된 FDI는 전체 FDI의 3.3% 수준에 불과하며, 전체 FDI 유치금액의 감소추세에는 변화가 없다.

아울러, FDI와 관련된 오만과 편견의 실상을 살펴보면, 외투기업이 자기 권리는 철저하게 요구하지만 책임과 의무에는 소홀한 불평등 계약의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으며, 외투기업은 연구개발이 활발하고 기술이전을 잘 하고 조세감면 등 특혜를 선호한다는 편견을 갖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 외국인직접투자의 활성화 과제: 한국형 FDI 모델과 경제자유구역의 리모델링 필요

우리는 자동차, 정보통신과 같은 제조업이 강하고, 국민소득 1만 7천 달러의 중진국으로서, '잠재력 이하 그룹'에서 잠재력도 높고 성과도 좋은 FDI '선도 그룹'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서비스업-M&A형 증액투자 등 선진국형 FDI 모델로 전환하기 보다는 제조업-그린필드형 신규투자를 중시하는 한국형 FDI 모델이 여전히 중요한 시점이다.

투자 인센티브 측면에서도 내외국인을 차별하는 조세감면 인센티브는 점차 줄여나가고 내외국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현금지원제도를 늘려나가며, 외국인투자 제한업종을 점차 줄이면서 노사관계를 선진화하는 등 FDI 관련 제도와 소프트웨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백화점식·저인망식 투자유치가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6개 경제자유구역도 지역여건에 맞게 차별화·특성화하는 방향으로 리모델링하고 병원과 학교 등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서비스분야 규제완화가 필요하다.

1. 외국인직접투자(FDI)¹⁾의 부진 현황과 특징

○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00년을 정점으로 외국인직접투자의 절대적 규모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GDP대비 비중도 추세적으로 하락

- 외환위기 이후 급증한 외국인직접투자는 2000년 152.5억불로 정점을 찍고 내려오기 시작하여 2009년도에는 114.8억불을 기록

·외환위기 직후 급증했던 투자자금이 2003년까지 빠져나간 후 정체 상태

< 외국인직접투자 연도별 투자실적 (신고기준) >



자료: 지식경제부

- 외국인투자의 GDP대비 비중도 '00년 1.8% 이후 하락하여 '09년 0.7%를 기록했고 독일, 중국, 영국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인 바 **FDI 활성화 노력이 필요**

·국민소득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에 이르기까지 연평균 FDI 증가율²⁾은 일본 6%, 프랑스 10%, 이태리 21%였으나, 우리나라는 2007년 2만불 도달 이후 FDI 증가율이 4.8%로 낮고 최근에는 감소 추세에 있음

1) 외국인직접투자(FDI)란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인 혹은 대한민국 국민이 영위하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주식 또는 지분을 10% 이상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단기 주식투자(Portfolio Investment)와는 다른 개념. 외국인직접투자의 유형에는 외국인이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것, 출자한 내국법인에 장기 차관을 제공하는 것, 비영리법인에 대해 출연하는 것 등이 있음. (자료: <http://www.investkorea.org>)

2) 예상한이만용, '한일간 외국인 직접투자 비교와 시사점', 현대경제연구원 VIP리포트, 2008.12.16

○(제조업 비중 크게 하락) 산업별 외국인투자(FDI) 추이를 보면, 제조업에 유입되는 비중은 크게 감소하여 2009년도에 32.4%에 불과하며, 서비스업의 투자와 상대적 비중은 급속히 증가하여 2009년에는 66.1%를 기록³⁾함

- 2000년부터 2009년까지의 추세를 보면, 서비스업의 비중은 60%내외에서 움직이면서 점차 증가하고, 제조업은 30%내외에서 점차 하락하고 있음
- 2000년 이후 10년간 서비스업의 평균 비중은 그 이전 10년 평균에 비해 19%p가량 증가했으며, 반대로 제조업은 20%p가량 크게 감소함
- 최근 10년간 서비스업의 FDI 건수 합계는 2만5천여 건으로 1990년대에 비해 5.5배 증가했으며, FDI 금액도 3.8배 급증함

< 외국인직접투자의 연도별·산업별 비중 추이 >

(단위: 건, 백만 달러, %)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건수	금액	비중	건수	금액	비중	건수	금액	비중
2000	832	6,877	45.1	3,259	8,121	53.2	54	259	1.7
2003	588	1,699	26.3	1,921	4,132	63.9	60	639	9.9
2006	713	4,253	37.8	2,339	6,626	58.9	55	368	3.3
2009	544	3,725	32.4	2,528	7,594	66.1	59	165	1.4
2000~2009 (A)	6,668	36,797	33.0	25,486	69,285	62.2	605	5,357	4.8
1990~1999 (B)	4,120	22,294	53.1	4,603	18,300	43.6	225	1,409	3.3
(A-B)	(2,546)	(14,497)	(-20.1)	(20,880)	(50,973)	(18.6)	(380)	(3,949)	(1.5)

자료: 지식경제부

주: 신고기준이며, 기타는 1차 산업 및 전기·가스·수도·건설을 포함. 비중은 금액 기준

- (일본보다 제조업 비중 낮아)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에 진입한 우리의 2007년과 일본의 1988년 FDI의 산업별 비중을 비교해보면, 우리는 제조업이 25.6%로 크게 하락했으나, 일본은 제조업이 74.7%로서 높은 비중을 유지

< 한일의 1인당 소득 2만 달러 진입시점의 산업별 FDI 구성 >

(단위 : %)

	한국(2007년)*	일본(1988년)**	일본(2007년)
제조업	25.6	74.7	6.2
서비스업	72.4	23.8	93.8

자료: 예상한·이만용, '한일간 외국인 직접투자 비교와 시사점', 현대경제연구원 VIP리포트, 2008.12.16

3) 2010년 2/4분기 제조업의 총생산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7.6%, 서비스업은 52.6%

○ 업종별로 외국인직접투자(FDI)의 비중 추이를 보면, 제조업에서는 전기전자, 화공, 운송용기계 등 세 업종에의 편중 현상이 더욱 심해짐

-**(3개 제조업종에 편중)** 제조업의 경우, 지난 10년간 전기전자, 운송용기계, 화공 3개 분야 비중이 평균 68.1%로서 1990년대 평균 56.7%보다 더 높아짐
·감소하고 있는 의약, 식품, 기계장비 분야의 FDI 비중을 다시 제고해야 함

< 제조업 업종별 외국인투자 추이 >

(단위: 건, 백만불, %)

	1990~1999 누계			2000~2009 누계		
	건수	금액	비중	건수	금액	비중
제조업	4,120	22,294	100.0	6,668	36,797	100.0
식품	435	2,642	11.8	272	1,513	4.1
섬유·직물·의류	478	546	1.1	260	779	2.1
제지·목재	145	2,199	10.1	98	378	1.0
화공	1,158	4,340	19.1	766	5,827	15.8
의약	273	728	2.0	130	484	1.3
비금속광물	233	2,113	4.7	209	2,033	5.5
금속	414	869	4.7	438	2,236	6.1
기계·장비	1,426	2,389	7.5	915	3,658	9.9
전기·전자	1,816	6,839	29.5	2,299	13,905	37.8
운송용기계	466	2,498	8.1	842	5,341	14.5
기타제조	661	662	1.4	439	640	1.7

자료: 지식경제부

-**(다양화된 서비스업)** 서비스업의 경우, 최근 10년간 금융보험업 비중이 35.6%에 달하며, 부동산·임대업과 사업서비스업은 각각 10.2%와 11.5%로 증가
·반면, 유통시장개방으로 '90년대 46.2%를 차지했던 유통업의 비중은 18.0%로 급락했으며, 음식숙박업도 '90년대 11.4%에서 최근 10년 평균 5.8%로 급감

< 서비스업 업종별 외국인투자 추이 >

(단위: 건, 백만불, %)

	1990~1999 누계			2000~2009 누계		
	건수	금액	비중	건수	금액	비중
서비스업	4,603	18,300	100.0	25,486	69,285	100.0
도·소매(유통)	3,024	8,457	46.2	16,372	12,465	18.0
음식·숙박	212	2,082	11.4	1,264	4,041	5.8
운수·창고(물류)	223	477	2.6	831	3,671	5.3
금융·보험	299	4,562	24.9	1,530	24,682	35.6
부동산·임대	63	343	1.9	878	7,042	10.2
사업서비스	597	1,090	6.0	3,388	7,984	11.5
기타서비스	185	1,290	7.0	1,223	9,400	13.6

자료: 지식경제부

· 금융·보험업종에 편중된 서비스업 FDI를 분산시키기 위해 사업서비스, 교육, 의료, 관광 등의 진입규제를 완화하는 등 정책적 노력이 필요

○(FDI 투자국 다양화) 지역별로 FDI의 추이를 보면, 최근 10년간 미주지역의 비중은 줄어들고, 구주 및 아주지역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음

- 최근 10년간 미국 네덜란드 독일 등 전통적인 FDI 주도국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 중국 영국 캐나다 등 신흥투자국들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음
- 버진아일랜드, 라부안, 라이베리아, 바하마, 파나마 등 조세피난처를 활용한 FDI의 비중은 '90년대 0.6%에서 2000년대 1.5%로 크게 높아짐

< 외국인직접투자 지역별 투자실적 >

(단위: 건, 백만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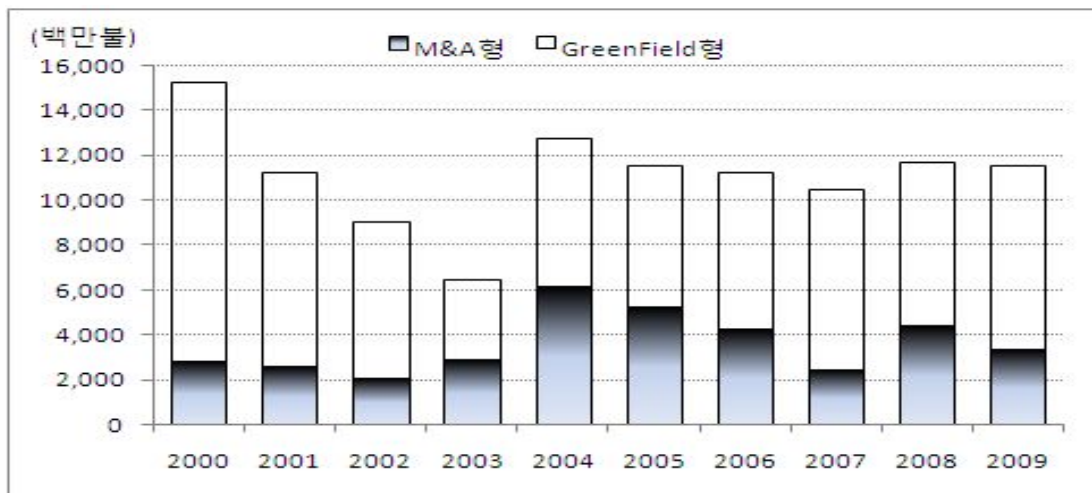
	1990~1999년 누계			2000~2009년 누계		
	건수	금액	비중	건수	금액	비중
국제기구	34	129	0.3	4	34	0.0
미주지역	2,802	14,757	35.1	6,748	35,942	32.3
미국	2,493	13,084	31.1	5,276	26,799	24.0
캐나다	125	625	1.5	441	3,302	3.0
버뮤다	41	107	0.3	112	1,634	1.5
케이만군도	20	685	1.6	346	2,896	2.6
아주지역	4,219	11,587	27.6	19,422	31,865	28.6
일본	2,498	4,550	10.8	5,239	15,778	14.2
싱가포르	199	1,810	4.3	783	4,061	3.6
홍콩	254	1,011	2.4	786	2,802	2.5
말레이시아	192	3,674	8.7	534	3,371	3.0
중국	682	73	0.2	5,832	2,600	2.3
대만	116	124	0.3	343	805	0.7
구주지역	2,023	15,350	36.5	4,515	42,357	38.0
독일	449	2,629	6.3	861	6,110	5.5
영국	284	1,148	2.7	729	8,720	7.8
프랑스	252	1,833	4.4	482	3,828	3.4
벨기에	29	520	1.2	139	2,768	2.5
네덜란드	370	6,728	16.0	684	11,953	10.7
아일랜드	81	1,130	2.7	141	1,126	1.0
조세회피지역	138	239	0.6	566	1,674	1.5
전 체	8,948	42,004	100.0	32,759	111,438	100.0

주: 신고기준임. 조세회피지역(tax haven)은 버진아일랜드, 라부안, 라이베리아, 파나마, 바하마 등

○(그린필드형의 복권) 형태별로 보면, 그린필드형 FDI의 비중이 '04년 52% 까지 감소했으나, '05년이후 다시 증가하여 '09년에는 71%까지 높아짐

- '01년부터 '04년까지 그린필드형 투자 비중이 계속 감소했으나, '05년부터 다시 증가하여 '09년에는 71%까지 높아짐
- M&A형 외국인투자의 경우, '04년에 48%까지 그 비중이 증가했으나, 이후 계속 감소하여 2009년에는 29%까지 떨어짐
- 선진국의 경우 대부분 M&A형 투자의 비중이 60% 이상⁴⁾인 바, 우리도 향후 M&A형의 비중이 높아질 전망이지만, 국민소득 3만불 시대로 도약하기까지는 제조업 분야 그린필드형 FDI의 지속적 유입을 유인하는 것이 필요
- 현재 정세 상태에 있는 6개 경제자유구역의 투자환경 개선과 리모델링, 바이오 나노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산업분야의 국제협력 활성화 등이 필요

< 성격별 연도별 외국인직접투자 추이 >



자료: 지식경제부

< 성격별 연대별 외국인직접투자 추이>

	그린필드형	M&A형
1990년대 평균	73.9	26.1
2000년대 평균	67.2	32.8

자료: 지식경제부

4) 장윤중(2008), e-KIET 산업경제정보 제404호(2008-30), 2008.6.23, p.9

○(증액투자 증가) 투자시점별 비중을 보면, 신규투자 비중이 감소하고 있음에 비해, 기존 투자기업들의 증액투자 비중이 과반 이상을 차지

- 2005년 이후 증액투자가 두드러지고 있으며 2009년에는 57.4%를 기록함
- 2000년 이후 10년 평균을 보면 신규투자가 42.8%, 증액투자가 52.5%, 장기차관이 4.7%로서 증액투자가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FDI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략적 제휴나 인수합병과 관련된 M&A투자나 기존 사업의 증액투자의 활성화가 필요하지만, FDI의 증가율을 年10%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신규 투자자를 발굴하려는 적극적 노력이 있어야 함

< 외국인직접투자 시점별 투자실적 >

(단위: 백만불, %)

연도	신규투자		증액투자		장기차관		전체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2000	5,463	35.8	9,493	61.9	354	2.3	15,256
2001	6,346	56.2	4,331	38.4	610	5.4	11,287
2002	5,678	62.4	3,221	35.4	196	2.2	9,095
2003	2,455	37.9	3,936	60.8	80	1.2	6,471
2004	6,200	48.5	5,556	43.4	1,039	8.1	12,796
2005	3,758	32.5	7,716	66.7	92	0.8	11,566
2006	4,341	38.6	6,515	57.9	391	3.5	11,247
2007	5,055	48.1	4,919	46.8	541	5.1	10,515
2008	4,421	37.8	6,263	53.5	1,027	8.8	11,711
2009	4,018	35.0	6,590	57.4	876	7.6	11,484
'00~'09 합계	47,735	42.8	58,540	52.5	5,206	4.7	111,428

주: 신고기준임

○ 투자금액의 규모별로 분류해 보면, 1억불 이상 대형투자의 비중이 60%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1천만불에서 1억불 미만의 중형투자가 30%내외, 1천만불 이하의 소형 투자가 10%내외를 점유하고 있음

-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로 인해 우리 경제가 구조조정과 침체를 겪었던 '99년, 2000년과 2009년에 1억불 이상 대형 투자의 비중이 각각 64.5%, 60.4%, 60.6%로서 평균보다 크게 높다는 점이 특징적임

2. 외국인직접투자(FDI)의 문제점, 그리고 오만과 편견

○(잠재력에 미달하는 성과) FDI의 유치 잠재력⁵⁾은 높는데 유치 성과는 부진

- UN 무역개발회의(UNCTAD)의 평가에 따르면, 우리는 외국인투자의 유치 잠재력은 비교적 높은 편인데 유치 성과는 낮아서 잠재력을 활용하지 못하는 '잠재력 이하' 그룹으로 분류됨
- 홍콩과 싱가포르, 영국, 말레이시아 등은 '선도그룹'으로서 잠재력도 높고, 성과도 높은 나라들
- 베트남, 페루, 콜롬비아 등은 '잠재력 이상' 그룹으로서 잠재력은 비교적 낮지만, 유치 성과는 상대적으로 높은 나라들
-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독일, 대만, 미국 등은 '잠재력 이하' 그룹에 속함

< FDI 유치 성과와 잠재력에 따른 국가그룹 구분 >

높음	(Below Potential) 한국, 중국, 일본, 독일, 호주, 대만 미국, 프랑스, 브라질, 덴마크, 스위스 캐나다, 멕시코, 노르웨이, 러시아, 포르투갈, 이태리, 그리스, 스페인	(Front-Runners) 벨기에, 홍콩, 싱가포르, 헝가리 영국, 말레이시아, 아이슬란드, 칠레 몽고, 네덜란드, 뉴질랜드, 폴란드 스웨덴, 태국, UAE
FDI 유치 잠재력	인도, 인도네시아, 볼리비아, 카메룬 콩고, 남아공, 에쿠아도르, 네팔 파키스탄, 필리핀, 터키, 가나, 스리랑카, 미얀마	베트남, 콜롬비아, 콩고, 코스타리카 이집트, 온두라스, 자메이카, 페루 수단, 우간다, 탄자니아, 우루과이 잠비아, 아르메니아
낮음	(Under-Performers)	(Above Potential)
	낮음	높음

자료: UNCTAD (www.unctad.org), 'World Investment Report 2008', p.13

주: 1. 2006년도 기준

2. '선도그룹'(Front-Runners)은 FDI 유치 잠재력과 성과가 모두 우수한 그룹, '역량이하 그룹' (Below Potential)은 잠재력은 좋은 편인데 성과가 미흡한 그룹, '역량이상 그룹' (Above Potential)은 잠재력은 우수한 편이 아니지만 성과는 우수한 그룹, '하위그룹'(Under-Performers)은 잠재력도 낮고 성과도 낮은 그룹

5) UNCTAD에서 발표하는 FDI 유치 잠재력지수는 1인당 GDP, GDP 성장률, 수출비중, IT인프라, 에너지사용량, R&D지출, 대학생비중, 국가위험도 등 12개 하부지표를 통해 산출되며, FDI 유치 성과지수는 세계 전체의 FDI 유치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측정

- 국민소득과 성장률, IT인프라 등으로 평가하는 FDI 유치 잠재력지수는 2000년 16위에서 2008년 16위로 비교적 좋은 점수를 유지하고 있지만, FDI 유치 성과지수는 2000년 92위에서 2008년 123위로 오히려 하락하고 있음
- 2009년 기준 국민소득 1만7천 달러의 중진국에 속하는 우리로서는 FDI 규모와 증가율을 더 높여서 '선도그룹'으로 도약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함

< 우리나라의 FDI 유치 잠재력 대비 성과 추이 >

그룹	국가	FDI 유치 성과 지수 (순위)			FDI 유치 잠재력 지수 (순위)		
		2000년	2005년	2008년	2000년	2005년	2008년
선도그룹 (front-runners)	홍콩	1	5	2	13	10	5
	칠레	31	35	27	46	50	53
	헝가리	36	28	1	41	41	40
	영국	23	23	78	5	3	8
잠재력 이하 (below-potential)	한국	92	123	123	16	15	16
	중국	62	68	94	49	36	30
	일본	130	134	129	12	24	25
	독일	9	103	127	10	9	3
잠재력 이상 (above-potential)	미국	67	122	99	1	1	1
	페루	94	66	53	76	91	82
하위그룹 (under-performers)	베트남	53	57	29	77	79	75
	인도	117	120	82	92	84	84
	남아공	118	79	80	72	66	72

자료: UNCTAD (www.unctad.org)

○(지원금 증가, 성과 부족) 외국인투자의 유치지원금은 증가하는데 성과는 감소

-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금액은 2001년 2,956억 원에서 2007년 4,755억 원으로 증가했는데, 유입되는 외국인직접투자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외국인직접투자는 2000년 152.5억 달러에서 2009년 114.8억 달러로 감소
-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의 대부분은 조세감면액으로 구성되어 있음

<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FDI) 유치 지원금 추이 >

(단위: 억 원)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조세감면액	2,415	2,010	1,798	3,490	5,446	3,945	3,919
부지매입비	545	671	559	328	655	742	742
현금지원 등	-	-	-	-	-	45	94
합 계	2,956	2,681	2,357	3,818	6,101	4,732	4,755

자료: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내부자료 (김준동 외(2009)에서 재인용)

○(경자구역 증가, 성과 부진) 외국인투자용 경제자유구역은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FDI의 유치는 여전히 부진 상태에서 못 벗어남

- 2003년 이후 설치된 인천, 부산 등 6개 경제자유구역에 유치된 해외직접투자(FDI)가 국가 전체 FDI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3%에 불과
-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특별히 조성된 6개의 경제자유구역⁶⁾에 2004년부터 2010년3월까지 유치된 FDI는 우리나라 전체의 3.3% 수준에 불과함
- 2004년부터 2009년7월말까지 경제자유구역에 도착한 외국인투자(FDI) 규모는 같은 기간의 외자유치 양해각서(MOU) 체결 총액의 14%⁷⁾에 그침

<전체 FDI 중 경제자유구역의 FDI가 차지하는 비중>

(%)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새만금·군산	황해	대구경북	총계
2004년	-	0.40	0.50	-	-	-	0.89
2005년	0.87	1.99	2.39	-	-	-	5.25
2006년	0.46	0.38	0.18	-	-	-	1.02
2007년	1.12	0.89	0.92	-	-	-	2.92
2008년	1.09	0.95	0.02	-	-	-	2.06
2009년	2.69	0.37	0.02	1.88	-	-	4.97
2010년*	9.44	5.73	0.09	9.74	-	-	25.0
총계	1.20	0.93	0.65	0.52	-	-	3.30

자료: 지식경제부 내부 자료

주: 2010년 자료는 2010년3월말 기준 자료임

- 아래 표와 같이, 6개 경제자유구역의 중점 유치업종이 다수 겹치기 때문에 지역별 특장점을 살린 차별화 전략이 쉽지 않음

<경제자유구역 개요 및 중점 유치 업종>

명칭	위치	지정	완료	면적	중점 유치 업종
인천	인천	'03년	'20년	209km ²	비즈니스, IT·BT, 국제금융, 레저
부산·진해	부산·경남	'03년	'20년	104km ²	해운물류, 자동차, 기계, 조선
광양만권	전남·경남	'03년	'20년	90km ²	해운물류, 소재산업
황해	경기·충남	'08년	'25년	55km ²	자동차부품, IT·BT, 부가가치 물류
지식창조형	대구·경북	'08년	'20년	39km ²	교육, 의료, 패션, IT, 부품·소재
새만금·군산	전북	'08년	'30년	66km ²	자동차, 조선, 부품소재, 친환경 산업

자료: 기획재정부 등,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방안,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3차 회의자료, 2008.05.23.

- 6)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의 제1조(목적)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음
- 7) 양해각서(MOU)에 따르면 총 103억7천만 달러의 외자를 유치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실제 도착한 투자(FDI) 금액은 15억 달러(14%)에 불과 (감사원, '경제자유구역 운영 및 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 보고서, 2009.12)

○(FDI의 오만: 권리와 책임의 불균형) 권리는 철저하게 요구하지만, 책임과 의무에는 소홀한 불평등 계약의 사례들이 다수 존재함⁸⁾

- 지난 10년 동안 하락 추세에 있는 외국인투자(FDI)의 활성화와 관련하여, 불필요한 제도적 실패⁹⁾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FDI와 관련된 몇 가지 ‘오만과 편견’의 해소 및 새로운 접근이 필요함
- 사례1: A경제자유구역을 개발하는 B외투기업은 2008년말까지 준공기로 한 상업업무용시설 53.8만㎡(약16만평)를 착공만하고 진행을 미루고 있으며, 아파트 및 주상복합건물의 분양에만 주력. 2008년 말까지의 목표 가운데 1.6%에 불과한 3,350만 달러(약370억 원)만 FDI로 유치한 채, 사업비의 대부분인 1조 9,259억 원은 국내 금융기관에서 차입
 - 문제점: A구역 광역자치단체의 의무는 명확하고 그 의무에 대한 이행강제 조항도 명백한 반면, B외투기업은 자의적으로 의무를 피할 수 있게 명시되어 있는 등 불평등계약에 따라 계약해지와 위약금 청구를 못하고 있음
- 사례2: C경제자유구역 중 개발이 부진한 23.4만㎡(약7만평)을 D도시공사가 E외투기업으로부터 약5,000억 원(3.3㎡당 706만원)에 재매입할 것을 추진
 - 문제점: 당초 E외투기업에 공급한 가격은 약 850억 원(3.3㎡당 120만원)에 불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고 FDI 유치목표도 못 채우고 있는 E외투기업에게 불로소득 4천억 원을 안겨주는 거래를 추진하다 2009년 말 감사원에 적발
- 사례3: 2009년 말 감사원 지적에 따라 2010년4월30일 다시 체결한 변경계약서에는 ‘의무 未이행時 벌칙부과 규정’을 추가했으나, 그 의무의 전제 조건이 너무 많아 실효성이 있는 의무규정인지 의심되며, 외자유치의 개념을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인정하여 B외투기업의 외자유치 의무를 가볍게 해줌

○(FDI에 대한 편견) 외국인투자(FDI)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4가지 편견에서 벗어나야 하며, 향후 새로운 시각과 접근이 필요함

8) 불평등계약의 사례1, 사례2는 감사원(2009.12) 자료를 참조

9) 제도가 선진화되어야 선진국의 자본을 유치할 수 있으며, 제도가 잘 설계되어 있었던 나라들이 빈곤에서 탈피하고 경제성장에 성공하여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음 (김승욱, ‘경제성장의 실패는 제도의 실패다’, 한국경제연구원 칼럼, 2010.8.25)

- **편견1: 외국인투자기업이 수익률이 높고 연구개발도 활발할 것이라는 편견**
 - 수익성이 좋고 배당도 많이 하지만, R&D 집약도는 높지 않음
 - 전반적으로 2008년 현재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기업에 비해서 R&D집약도를 포함한 R&D 활동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¹⁰⁾

<외투기업과 국내기업의 수익률, 배당, 연구개발투자 비교 >

(%)

구분		2003	2005	2008
매출액 영업이익률	외국인투자기업	6.9	6.2	5.6
	국내기업	6.9	5.7	5.0
배당성향	외국인투자기업	33.0	40.2	35.6
	국내기업	19.2	19.0	17.8
R&D 집약도	외국인투자기업	1.26	1.6	0.84
	국내기업	1.56	1.1	1.71

자료: 지식경제부, '외국인투자기업 경영실태 조사', 각 년도

주: 1. 매출액영업이익률 = (영업이익/매출액)*100, R&D집약도 = (연구개발비/매출액)*100.

배당성향 = (배당액/당기순이익)*100.

2. 2003년은 제조업 기준. 2005년과 2008년의 경우, R&D집약도는 제조업 기준.

- **편견2: 외국인투자기업이 기술이전을 활발히 할 것이라는 편견**
 - 2003년도에 전산업을 대상으로 969개 외투기업의 R&D 현황을 조사한 결과, 국내 관련기업에 공식적이건 비공식적이건 기술이전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은 75개사, 조사대상의 7.7%에 불과¹¹⁾
- **편견3: 투자 인센티브를 많이 부여하면 투자 유치도 많아질 것이라는 편견**
 -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금액의 FDI 순유입액 대비 비중은 9%로 아일랜드의 0.9%에 비해 10배 가량 높아 상당히 비효율적임을 알 수 있음

<우리나라와 아일랜드의 투자인센티브 금액 대비 투자유입액 비교>

(단위: 백만 달러, %)

	한국	아일랜드
FDI 순유입액	4,950	12,811
인센티브 지급금액	453	115
인센티브지급/FDI 순유입액	9%	0.89%
인센티브 유형	조세감면 위주 / 국내외기업 세율 차등	현금지원 위주 / 국내외기업 차별화 없음

자료: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내부 자료 (김준동 외(2009)에서 재인용)

주: 투자금액 및 인센티브금액은 2006년 기준

10)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분석하면 외국인투자기업의 R&D 집중도가 높게 나타남

11) 김기국(2003.11), '외국인투자기업의 R&D 현황 및 과제', STEPI, p.17

- 편견4: 외국인투자기업은 특혜와 조세감면을 원할 것이라는 편견
 - 외국인투자기업이 가장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분야라고 제시한 항목은 '노사관계'였고 '조세부담 완화'는 4번째 응답률을 보임

< 향후 한국의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선결과제 >

(%)

구분	2006	2007	2008
건전한 노사관계 정착	34.6	38.3	26.7
국민의식 국제화	31.1	38.7	26.7
시장개방 확대	22.5	35.2	24.6
조세부담 완화	13.2	13.8	19.2
외국어사용 보편화	13.2	13.8	16.7
투명한 기업거래 관행 확보	12.9	13.0	12.8
보다 자유화된 국제금융환경 조성	10.7	12.3	11.0
정치적 안정	8.9	8.7	7.8
정부 행정지원서비스 강화	12.1	5.1	7.8
물류환경 정비	6.1	6.3	7.5
정부의 R&D지원 강화	0.0	0.0	6.0

자료: KOTRA(2008), 2008년 외국인투자기업 경영환경 애로조사, KOTRA자료 08-025

주: 복수응답 가능. 랜덤샘플링을 통해 280여개 기업을 선정하여 설문조사 실시.

3. 외국인투자의 활성화 과제: 한국형 FDI 모델과 경자구역 리모델링 필요

○(한국형 FDI 모델) 기존의 FDI 활성화 논의는 서비스업종, M&A형 투자, 증액투자가 중심이 되는 선진국형 FDI로 전환¹²⁾할 것을 주문했으나, 우리의 2009년 1인당 소득은 1만7천불 수준의 중진국에 불과함

- 잠재성장률이 3%대로 하락하고 있는 국민소득 1만7천불 수준의 중진국으로서, 제조업의 경쟁력을 더 키우고 새로운 투자자를 더 유치하여 FDI 증가율을 현재의 4.5% 수준에서 10% 이상으로 높게 유지하는 것이 필요함
 - FDI 유치 잠재력에 못미치는 성과를 보이는 '잠재력 이하 그룹'에서 벗어나 FDI 잠재력도 높고 성과도 좋은 '선도그룹'으로 도약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선진국형 FDI는 주로 서비스업종에 M&A형 투자, 증액투자가 다수를 차지하지만, 우리나라의 발전단계에 부합하는 그린필드(GreenField)형 신규 투자가 더 활성화되어야 함

12) 김준동 외(2009), 문휘창(2009) 등

한국형 FDI 모델

- ① 제조업종 FDI 활성화, ② GreenField형 FDI 활성화
- ③ 신규투자 활성화, ④ 투자국가 다변화, ⑤ 지역별 특화업종 유치
- ⑥ 국내기업 차별 철폐

- (국내기업 차별 철폐) 백화점식·저인망식 투자유치가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통해 우리 산업발전 단계와 경제자유구역의 특성에 맞는 투자자를 유치하며, 국내기업에 대한 차별을 없애는 등의 새로운 접근이 필요함
 - 우리나라 내수시장, 산업구조와 연결하여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는 업종과 투자자를 선정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전략적으로 유치¹³⁾함
 - 백화점식 인센티브가 아니라 ‘업종별 차별화’를 유인할 수 있는 업종별 인센티브를 제시하며, 규제완화와 투자환경의 개선¹⁴⁾이 지속적으로 필요
 -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국내기업을 차별하는 조세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OECD 회원국은 없으며¹⁵⁾, 내외국기업에 대해서 동등하게 현금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최근 우리 정부에서도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 한도액을 설정하고, 고용 창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추가하는 등 개선방안¹⁶⁾을 준비하고 있음
- (투자업종의 선택과 집중) 위와 같은 새로운 접근과 모델, FDI의 구조변화 등을 감안하여, 우리 산업발전 단계와 경제자유구역의 특성에 맞는 외국인 투자업종과 기업을 아래와 같이 선별적으로 유치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
 - 부품소재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제조업을 우선적으로 유치

13) 싱가포르와 중국은 이미 자국 경제의 발전단계에 맞는 전략적 업종과 투자자를 선별하여 유인하는 전략으로 전환한 바 있음(인베스트코리아, 『외국사례로 본 투자환경 개선방향』, 2006)

14) 투자유치 선진국들(영국, 아일랜드, 네덜란드, 싱가포르 등)은 세제감면 또는 특혜제도 등의 인센티브 운영 보다는 발달된 인프라, 우수한 노동력, 유리한 세제, 편리한 세관, 우수한 금융시스템 등 투자환경 자체가 유인으로 작용

15) 김준동 외(2009), p.194

16)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고도기술수반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외국인투자기업 중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감면허가를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예를 들면,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개별형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단지형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정부는 이와 같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받는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금액을 투자금액의 50% (단지형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또는 70%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개별형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이내로 제한하되, 대신 고용증대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증가인원 1인당 1,000만원씩 추가지원(투자금액의 20%이내)하는 2011년도 세계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에 기여하는 첨단기술(High-End) 및 연구개발 업종
- 녹색성장에 기여하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종
- 기후변화협약과 탄소배출 저감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친환경 업종
- 교육 의료 법률 관광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종

싱가포르 'Industry 21' (투자유치정책 비전)

- 지식집약형 경제구조 확립에 기여할 9개 전략적 투자유치분야 선정

- ① 전자공학 ② 석유화학 ③ 생명과학 ④ 엔지니어링 ⑤ 교육서비스
- ⑥ 의료서비스 ⑦ 물류 ⑧ 정보통신미디어 ⑨ 지역본부

- 9개 분야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을 중점적으로 유치

○(제도와 '소프트웨어'의 경쟁력 강화) 국가경쟁력이 하락 또는 정체하고 있는 바, 세부 기준을 보면 '하드웨어'와 기초 '인프라'는 잘 되어 있는데 비해 제도와 정책의 예측가능성 등 소프트웨어 경쟁력이 많이 뒤쳐져 있음

- 공항, 항만, 도로, 산업단지 등 기본적인 하드웨어적 인프라는 잘 갖춰져 있으나, 제도를 투명하게 운용하고, 노동과 금융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노력이 부족하므로, FDI 관련 제도와 소프트웨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해야 함
 - 경영에 꼭 필요한 접대비나 기타 비용을 인정해주는 제도는 갖춰져 있으나, 선진 각국의 운용사례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직원을 위한 기숙사나 사택과 관련된 비용을 인정해 주는 제도를 우리도 갖고 있지만, 도심에 있는 기숙사도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개선이 필요

< 세계경제포럼(WEF) 발표 국가경쟁력 세부 순위 >

연도	전체 순위	기본요인				효율성 증진						기업혁신 및 성숙도	
		제도적 요인	인프라	거시 경제	보건, 교육 및 고등교육	고등교육 및 훈련	상품 시장 효율성	노동 시장 효율성	금융 시장 성숙도	기술 수용 적극성	시장 규모	기업 활동 성숙도	기업 혁신
'07	11	26	16	8	27	6	16	24	27	7	11	9	8
'10	22	62	18	6	21	15	38	78	83	19	11	24	12

- 우리나라의 경제적 자유도는 '95년 50위에서 2007년 32위로 많이 개선되었으나 노동시장의 유연성, 노사관계 안정화, 의료 교육 법률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분야의 규제완화, 국민 의식의 세계화 등에서 개선의 여지가 많음

< 국가별 경제적 자유도 비교 >

	1995년	2000년	2005년	2007년
아일랜드	8.17 (5위)	8.13 (8위)	8.09 (6위)	7.98 (7위)
영국	8.07 (6위)	8.25 (6위)	8.10 (5위)	7.89 (9위)
대만	7.25 (22위)	7.28 (26위)	7.68 (15위)	7.62 (16위)
독일	7.52 (14위)	7.50 (15위)	7.65 (18위)	7.50 (27위)
일본	7.03 (28위)	7.43 (17위)	7.54 (22위)	7.46 (30위)
한국	6.33 (50위)	6.58 (54위)	7.28 (38위)	7.45 (32위)

자료: Fraser Institute, 『Economic Freedom of the World』, 2009

○(경제자유구역의 리모델링) 경제자유구역에서의 규제완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차별화 전략, 경제자유구역청장의 재량권 강화 등 리모델링이 필요함

- 경제자유구역청의 재량권 강화, 행정절차 간소화와 서비스산업 진입규제 완화 등을 통해 외국인투자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함
 -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투자촉진을 위해 지정한 만큼 그에 맞는 경영환경과 정주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완화와 행정절차 간소화**가 필요
 - 예를 들어 아파트, 상업시설 등 부동산개발에서 벗어나, 외국인 정주기능의 핵심인 **외국인학교, 외국대학, 외국병원** 등을 유치하는데 전력을 기울임
 - 수천억 원 이상의 대형 프로젝트를 관리할 수 있는 유능한 직원을 채용하고, **능력에 맞게 처우할 수 있는 재량권을 경제자유구역청에 부여**
- 6개 경제자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모델의 구축이 필요
 - 6개 경제자유구역의 중점 유치업종이 다수 겹치기 때문에 차별화가 쉽지 않은 바, 지역별 특징점을 살린 선택과 집중, 특성화 전략이 필요
 - 예를 들면, **지식서비스산업형(인천), IT바이오 등 첨단산업형(대구-경북)**, 물류인프라의 장점을 살린 **물류허브형(부산, 광양)**, 친환경·농업·에너지산업에 기반한 **녹색성장형(세만금-군산)** 등과 같이 차별화된 모델로 개발

김 동 열 연구위원(2072-6213, dykim@hri.co.kr)

<참고문헌>

- 감사원, '경제자유구역 운영 및 사업추진실태' 감사결과 보고서, 2009.12
- 김기국(2003.11), '외국인투자기업의 R&D 현황 및 과제', STEPI, p.17
- 김준동 외(2009), 『국내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제적효과 및 투자환경 개선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09-04
- 남광희·윤성훈 '우리나라 FDI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은행, 2005
- 문휘창(2009), '외국인투자유치전략, 이제는 바꿔야', 2009.6.23 (제2회 외국인투자
전문가포럼 발표자료)
- 예상한·이만용, '한일간 외국인 직접투자 비교와 시사점', 현대경제연구원 VIP
리포트, 2008.12.16
- 이병기(2008), '외국인직접투자 환경과 제도개선 과제', 한국경제연구원 정책연구
2008-07
- 인베스트코리아, 『외국사례로 본 투자환경 개선방향』, 2006
- 장윤종, '외환위기 10년,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의 특징과 시사점', 산업연구원
e-KIET 산업경제정보 제404호(2008-30), 2008.6.23
- 조영태(2008), '외국인직접투자(FDI)가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효과측정 및 유형에
관한 연구, 서울벤처정보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지식경제부, '외국인투자기업 경영실태 조사', 각 년도
- 지식경제부,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통계
- KOTRA(2008), 2008년 외국인투자기업 경영환경 애로조사, KOTRA자료 08-025
- Fraser Institute, 'Economic Freedom of the World', 2009
-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08, 2010
- World Bank, 'Special Economic Zones: Performances, Lessons learned, and
Implications for Zone Development, April 2008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 국내외 성장률 추이

구분	2008년			2009년					2010		
	연간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E)	1/4	2/4
미국	0.0	-4.0	-6.8	-2.6	-4.9	-0.7	1.6	5.0	3.3	3.7	1.7
유로 지역	0.6	-0.4	-1.9	-4.1	-2.5	-0.1	0.4	0.0	1.0	0.2	1.0
일본	-1.2	-5.4	-10.0	-5.2	-16.6	10.4	-1.0	-4.1	2.4	4.4	0.4
중국	9.6	9.0	6.8	8.7	6.2	7.9	9.1	10.7	10.5	11.9	10.3
한국	2.3	3.1	-3.4	0.2	-4.3	-2.2	1.0	6.0	5.9	8.1	7.2

주: 1) 2010년 전망치(E)는 IMF 2010년 7월 기준이고 한국은 현대경제연구원 전망치임
 2) 미국, 일본은 전기대비 연율, EU는 전기대비, 중국, 한국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임.

□ 국제 금융 지표

구분	2008년말	2009년		2010년			
		6월말	12월말	9월24일	10월1일	전주비	
해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2.21	3.54	3.83	2.61	2.54	-0.07%p
	엔/달러	90.76	96.65	92.93	84.31	83.57	-0.74¥
	달러/유로	1.4042	1.4141	1.4413	1.3486	1.3622	0.0136\$
	다우존스지수(p)	8,776	8,447	10,428	10,860	10,788	-72p
	닛케이지수(p)	8,860	9,958	10,655	9,472	9,369	-103p
국내	국고채 3년물 금리(%)	3.41	4.16	4.41	3.44	3.26	-0.18%p
	원/달러(원)	1,259.5	1,273.9	1,164.5	1,155.2	1,130.4	-24.8원
	코스피지수(p)	1,124.5	1,390.1	1,682.8	1,846.6	1,876.7	30.1p

주: 10월 1일 해외지표는 전일(9월 30일) 기준임.

□ 해외 원자재 가격 지표

구분	2008년말	2009년		2010년			
		6월말	12월말	9월24일	10월1일	전주비	
국제 유가	WTI	44.61	69.08	79.35	75.10	79.95	4.85\$
	Dubai	36.45	71.85	78.06	75.07	77.24	2.17\$
CRB선물지수	229.54	249.96	283.38	283.63	286.86	3.23p	

1) CRB지수는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귀금속 등의 주요 21개 주요 상품선물 가격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지수로 원자재 가격의 국제기준으로 간주됨.